

제369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7월10일(수)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5.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6.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09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종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강남갑 출신 이종구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기반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산자중기위원회가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하는 데 위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으로써 여러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 역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위원님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배·김삼화·홍의락 간사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활동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경제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특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구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정재 위원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정재 위원입니다.

오늘 새로 보임이 됐는데요 와서 보니까 민주당의 전직 원내대표님·현직 원내대표님,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아서 뭔가 잘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각종 산업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등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기틀이 되고 있는 분야에서 많은 정책과 또 올바른 법제도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 보겠습니다.

선후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소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영철 원장님.

(소속기관장 인사)

참고로 오늘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안설명과 간단한 질의 후에 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종구 예,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이종배 위원 지난 4월 초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2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했고 또 아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직도 수많은 이재민들이 아주 많은 고초

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5월 29일 정부부처와 이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하기 위해서 유관부처 차관들에게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하도록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마치 사전에 짠 것처럼 한명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협력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산중위 간사로서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야당과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하는 그런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지금도 정부의 조사도 지지부진하고 생색내기 용 빈껍데기 대책만 보여 주고 있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소상공인 또 수많은 이재민들이 하루하루 어렵게 버텨 나가고 잿더미 위에서 나날이 빗더미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일 참석하지 않은 산자부차관 또 중기부차관, 한전 부사장, 한번도 사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전에 얘기도 안 했어요. 대개, 저도 정부에 수십 년간 있었는데 참석을 못 하면 다른 사람 대참을 시키든지, 양해를 구해서 대참을 시켜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게 해야지 아무도 참석도 안 하고 사전 양해도 없고 또 사후에도 한번 이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어요. 개별적으로 만났어도 이에 대해서 일언반구 아무런 사과도 없었어요. 이런 정부의 태도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장관들이 알고 장관이 지시를 했는지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는지 그 배경도 설명하고 왜 안 왔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저희들은 정부의 모든 일에 협조할 수 없다, 협력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홍의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구 예, 간단히 하시지요.

○홍의락 위원 예.

또 회의가 열렸나 봅니다. 또 이런 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국회는 열리지 않았고 야당에서 정부 측 차관을 7명인가 8명인가를 한 자리에 다 모아서 대책회의를 하겠다고 했습

니다.

과거에 어떤 경우도 이렇게…… 산업부차관을 불렀다든가 중기부차관을 불렀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한 자리에 7명, 8명을 불러서 마치 당정청 회의를 하는 것처럼 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또다시 이렇게 얘기할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존경하는 홍의락 간사님, 저는 정부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정부의 의견을,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듣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당 대표가 부르면 장관들이 몇 명씩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야당은 같이 회의하자는 건데, 공식적으로, 그것도 한꺼번에 모여서 1회에 회의하자는 그런 뜻이고 장관들은 바쁘기 때문에 차관들을 부른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부의 의견, 사과를 듣자는 건데 그것 가지고…… 이유가 뭐니까?

○위원장 이종구 그래요.

산자부장관계서……

산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위원장 이종구 그러니까 산자부장관이 유감 표시를 하시고 차관이 설명을 좀 하면 좋겠네요. 오늘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일단 산자부장관이 간단히 유감을 표명을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정부 측에서는 그때 일정한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협의가 앞으로 야당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그래요.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세요, 차관계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고개를 끄덕임)

○이종배 위원 차관님이 지금 얘기를 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차관이 나중에 오늘……

○이종배 위원 아니, 오늘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이종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관이 얘기하시겠어요? 간단히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께 따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자유한국당에서 요청하셨던 그 당일이 을지태극훈련 디데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6시에 세종청사로 저희가 비상소집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을지태극훈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정부 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들 때문에 참여가 어려웠다는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한 말씀……

○이종배 위원 아니, 저게 지금 사과한 거예요, 해명한 거고?

○박범계 위원 아니,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간사님.

잘막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중기부도 들으세요.

○위원장 이종구 예,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중기부도 당일 날 정부 차원에서 을지태극훈련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비상소집이 있었고요 이어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회의가 계속 이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대전에서 그 당시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양해요?

○박범계 위원 잠깐만요.

○이종배 위원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참석을 안 해요?

○박범계 위원 간사님, 잠깐……

○우원식 위원 아니, 여기 발언권 주지 않으셨어요?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산업부차관님이나 중기부차관님이나 을지훈련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은 제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당정 협의는 법적인 제도적 근거를 갖고 하는 협의고요, 야당의 원내대표가 범부처를 불렀다? 그것의 근거가 과연 있는지 한번 따져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정 협의를—여당이 하는—당정 협의 수준을 뛰어 넘는, 그와 버금가는 야당의 당정 협의 요구라면 그러면 정당에서 집권과 비집권의 차이가 뭐니까? 개별적으로 야당은 국회라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라는 그런 틀 속에서 관계부처의 견제와 감시·협의를 할 수 있는 거지 정당의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정부의 부처 장차관을 부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선거를 하고 집권을 하며 집권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정부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이종배 간사님의 말씀에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이종배 위원 의사진행……

○박범계 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왜 갑자기 산자위 분위기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 측에서도 이 문제가 향후에 일종의 시범 케이스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당의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야당의 소관 당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부부처에 대규모로 와라 해서 보고해라, 회의하자라고 할 때마다 을지훈련을 핑계를 대실 예정이십니까?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처 내에서 국무총리든 국무조정실이든……

○위원장 이종구 박범계 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박범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구 아니, 너무 이걸 갖다가……

○박범계 위원 시간도 지금 남아 있을뿐더러, 왜 그러세요?

○위원장 이종구 아니, 그 정도로 하세요. 다들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박범계 위원 아니, 제 말씀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려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회의를 통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장관님들 와 계시지만 이렇게 을지훈련, 을지훈련 아니면 앞으로 그러면 부르는 족족 다 범부처가 다 이렇게 야당에 가서 회의하고, 물론 협조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것이 일종의 법적 의무인 것처럼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구 예, 하세요.

○이종배 위원 박범계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데 상당히 또 법률가로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신 점은 있지만, 저도 정부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해 왔고 야당이 부르든 여당이 부르든, 이 자리에 계시는 박영선 장관님이 야당에 있을 때도 언제든지 저희들 가서 협조하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당은 같은 집권세력이기 때문

에 여당이 부르든 건 법적으로 가능하고 야당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야당이 부르든 여당이 부르든 국회 차원에서 협력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때는 그런 건 여야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구태여 구분할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차관들 답변이,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본인이 못 올 때는 사전에 통보를 대개 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통보를 하지요. 그리고 못 할 때는 다른 사람을 대참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지요. 그것마저도 안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을지훈련 갔기 때문에 못 왔다, 양해 바란다? 사후에도 한마디도 없고 그게 지금 사과하는 태도입니까?

○위원장 이종구 이제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기업부 소관

2.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2019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09시27분)

○위원장 이종구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께서는 9시 40분경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제안설명과 함께 최근의 현안

으로 돼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투자와 수출 부진도 지속되는 등 경기하방 위험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금년 초에는 유례없는 미세먼지가 발생되어 국민 건강이 매우 위협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을 이후 미세먼지 악화시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 투자와 장비 투자가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미세먼지 등 대규모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 목적, 국민 체감도, 집행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지역 지원, 수출 활력 제고, 포항 지진 복구 등 28개 사업에 총 437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역보험기금 출연 1700억 원,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 지원 298억 원, 산업단지 환경 조성 410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121억 원, 신·재생 금융 지원 3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경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절실한 노력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에 관련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보복적 성격의 조치로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도 상식에 반하는 비대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고 또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서 수입국의 다변화 또 국내 생산설비 확충 또 국산화 개발 등을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또 우리 부품·소재·장비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나갈 것입니다.

또 어제는 일본의 최근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이유로 해서 우리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와 또 3개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현재 운영해 오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제평화와 또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도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우리의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금번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관·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실시했고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상반된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차분하지만 또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존경하는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기업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및 기금 수입은 19년 당초 대비 7.7%가 증가한 14조 5747억 원입니다. 세출 및 기금 지출 규모는 2019년도 당초 10조 2664억 원보다 1조 2839억 원을 증액한 11조 5503억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용자 2445억 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93억 원,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76억 원 등 282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과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채원 등 10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및 중소·벤처 기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창업사업화 719억 원, 모태조합 출자 2000억 원 및 정책자금융자 5080억 원 등 7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혁신, 수출 확대 등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711억 원, 수출 지원 기반 활용 100억 원 등 100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규모 및 주요 사업 검토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 규모는 중앙정부 추경액 6.7조 원 대비 6.5%인 4378억 원으로 올해 정부 총지출 대비 산업통상자원부 지출 비중인 1.6%보다 큰 수준으로 산업위기지역을 위하여 301억 8500만 원,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873억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897억 6800만 원, 포항지역 등에 대한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해 839억 96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경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추경의 목적인 미세먼지 저감 및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용접·도장 전문인력 양성센터사업의 경우 용접·도장 교육과정의 경우 취업 지원 등 사업 성과가 우수한 교육과정 위주로 사업비가 투입될 필요가 있으며, LNG 화물창 교육과정은 연내 장비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도입 경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 지원은 최근 미세먼지 심각성에 따른 지원 필요성과 발전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업 준비의 적절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광해관리공단 출연 사업의 경우 국내 광산의 먼지날림방지사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나 광해방지의무자의 광해방지사업 신청 철회에 따라 금년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은 펀드 출자 이후 공사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구조로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비의 경우 올 연말까지 SPC 설립 정도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연내 경기부양 효과 등을 유발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산업융합문화 기반 조성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 책임 보험료 예상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 건수가 낮은 상황으로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역투자촉진사업은 상생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이나 현재 계류된 법률 개정 및 지원 지침 마련 이후 지자체를 통해 지역별 실수요를 파악하고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박장호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호 전문위원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개요는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 분야에 신·기보 출연 1000억 원 및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예산 32억 원 등 1032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 분야에 정책자금 7525억 원 및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2000억 원 등 1조 180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직간접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별로는 시급한 추진 필요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및 사업 운용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스마트공장 배움터 운영 확대 등을 위하여 71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기준으로 실적행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신속한 집행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스마트공장 배움터 사업은 본예산을 통한 배움터

추가 개소, 스마트랩 등 유사사업 신설과 교육 수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증액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창업기업자금(용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2조 800억 원 대비 1000억 원이 증액된 2조 1800억 원으로 내역자금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전액 집행할 계획이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일자리 관련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자금이 편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쪽,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은 유망업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을 유도하여 창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3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졸업자의 다수가 과밀업종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산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전통적 의미의 추경에 적합하지 않지 않나, 좀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자부에서 한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 R&D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R&D 부분에 총 증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24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295억 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실제 추경안에 배정된 R&D 사업들 중에는 대부분이 3년 이상 기간 동안 수행 예정인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올해 내 추경예산이 다 집행되기 어렵지 않나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말씀 주신 것처럼 R&D가 궁극적으로 효과가 발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들이 추경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 내용은 미세먼지 감축이라든지 또 자동차, 조선 등 산업위기기업중에서 지금이라도 올해 중에 빨리 시작을 해야 그 효과가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번에 요청을 드렸고요.

이러한 R&D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은 16년, 17년, 18년에도 그러한 시급성을 국회에서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경으로 편성한 액수가 상당히 정부부처 중에서 많은 양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1조 조금 넘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습니다.

장관 임명될 때가 4월 8일 자이고 추경이 제출될 때가 4월 25일 정도인데 장관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추경안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를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당시에 아주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경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제출을 할 당시에 제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제 의견이 조금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결국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에 언론에서나 다른 야당들에서 추경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언론보도도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언론보도 내용을 보시고 나니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그 추경안이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되는 추경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점수를 매기기는 그렇고요. 추경을 편성했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미세먼지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성이 대두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관한 그런

대책이 좀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빨리 좀 통과가 돼서 국회에서 이것이 처리가 됐으면, 그런 국민적 바람을 해소할 수 있는 계절적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언론이나 야당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추후에 검토해 보니 일부의 지적들에 대해서는 그게 타당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서울시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제로페이 관련해서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단말기 지원이라든지 홍보·마케팅 사업에 약 76억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제로페이 확대사업은 이미 올해에도 본예산으로도 60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로페이 사업이라는 것이 추경에 올릴 만하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게 가맹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지 전통적 의미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해야 될 시급성이 정말로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현재 가맹점 수가 25만 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로페이 정책이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분 장관님께 제가 질의시간이 끝났지만 한마디만 더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자위 회의 모두에 나왔던 자유한국당에서 부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자고 했을 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구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 질의 준비해 주시지요.

○이용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법계 위

원님이 지적한 그런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대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이종구 정리해 주시지요.

○이용주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부처에서 좀 등한시했다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들은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윤한홍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한홍 위원 산업부장관님,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 이후에 일본이 무역보복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상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무런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정부에서……

○윤한홍 위원 그동안 기간이 좀 오래 지났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정부에서는 지난번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무대응이라고 질책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일본에서 무역보복을 하고 나서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을 보면 정말 무대책이에요. WTO 제소한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몇 년 걸립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지난……

○윤한홍 위원 아니, 몇 년 걸려요? WTO 제소하면 판결 나는 데 몇 년 걸립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15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윤한홍 위원 15개월 걸리고 항소하거나 상소하면 또 2~3년 더 걸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R&D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언제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또 국민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장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징용 판결한 것은 이미 벌써 한동안 세월이 흘렀는데, 판결한 것이 1년도 더 지났지요? 그 판결 안 한다고 적폐라고 그래 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 공소장에도 그게 들어 있어요, 재판 판결 안 했다고. 그래 놓고 지금까지 대책 없다가 이제 나와서 WTO 제소하고 부품 개발하고 한단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무대책을 대책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거기다가 일본에서 지금 불화수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화학무기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북한에 건너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셨지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윤한홍 위원 지금 불화수소에 대해서 북한에 건너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2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 TF를 구성해서 정부 유관부처와 함께 또 우리 민간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면서 대응을 준비를 해 왔고요. 일본이 이번 7월 1일에 그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두 가지 조치가 WTO 규범과 또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대응할 수 있는 조치인 WTO를 통한 대응 조치를 일단 발표를 드렸고요.

○윤한홍 위원 장관님,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시는 어떤 대응을……

○윤한홍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야기 드릴게요. 그것은 대책이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아니,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윤한홍 위원 아무런 대책이 아닌 것을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아닙니다. 위원님,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윤한홍 위원** 불화수소를 이야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일단 외교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대응을 해서 철회를 요청하고 있고……

○**윤한홍 위원** 정말 무능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또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이리이러이러한 대책을 이리이렇게 하는 것은……

○**윤한홍 위원** 아니, 잠깐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정말 무능하고 무대책을 지금 또 국민들에게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불화수소가 북한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두 번째,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언론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고하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또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의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 통제제도다……

○**윤한홍 위원** 장관님,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그리고……

○**윤한홍 위원** 장관님! 질문하는 데 답변하세요! 동문서답하지 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저희 여태까지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불화수소의 양을 최근……

○**윤한홍 위원** 불화수소가 얼마나 수입이 되어서 국내에서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통계를 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윤한홍 위원**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고 일본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제가 어제 정면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위원님.

○**윤한홍 위원** 통계를 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통계, 제가 금번……

○**윤한홍 위원** 통계 제출하시고 국민들에게 알리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위원님, 저희가 어제 수입·가공한 것에 대해서……

○**윤한홍 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아니, 동문서답이 아니라요 제가 어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정부가 여태까지 조사해서 그 결과가 없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국회에 자료제출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된다면 일본이 그 내용을 밝혀라,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윤한홍 위원** 국회에 자료제출하시고, 그만하세요.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얼마나 수입해서 국내에서 얼마를 쓰고, 그 통계를 내시면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그것을 어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위원님.

○**윤한홍 위원** 그 통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위원님에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가세요.

○**백재현 위원** 시간이…… 저는 가서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그래요?

○**백재현 위원** 제가 양해할게요. 아까 9시 40분이라 그랬는데 지금 벌써 15분이 지났는데.

○**위원장 이종구** 그러면 산자부장관님 떠나시고…… 조금만 앉아 계시지요.

○**백재현 위원** 지금 윤한홍 위원이 지적한 문제, 불화수소와 관련된 얘기라 뭐한테 하실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답변하십시오, 중요한 일이니만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위원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제 언론을 통해서…… 일본의 불화수소 수입과 관련된 최근치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한 결과 불화수소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전략물자를 갖고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 정확하게 수출통

제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말 규제를 어긴 게 있다면 일본이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철회해야 될 것을 제가 어제 요청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우리나라 전략물자가 그렇게 쉽게 될 수 없고, 통제가 잘 되어 있고 규제가 그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 보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본이……

○**위원장 이종구** 산자부장관 떠나셔도 좋습니다.

○**백재현 위원** 가지지요.

박영선 중기부장관도 같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그러세요.

○**백재현 위원** 그럼 같이 떠나십시오.

○**위원장 이종구** 중기부장관도 좋습니다. 가세요.

○**백재현 위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님,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적자와 관련된 일은 지난 65년도 수교 이후 55년 동안에 지금 얼마나 됩니까? 무역적자 폭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0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달러로 따지면 약 6130억 불 이상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 트럼프식 발표로 얘기를 한다면 어찌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한테 700조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의 문제를 또는 역사의 문제를, 자기의 선거전략에서 만드는 문제를 경제·무역 분쟁으로 만들어 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일본의 하는 처사가 온당치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55년간 무역적자 폭—약 6130억 불, 약 700조가 넘는 이 막대한 무역적자—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업정책실장도 이번에 좀 들어보세요.

차관님 계시니까 차관님, 제가 보기에 앞으로 무역분쟁이 변수가 아닐 것 같아요. 상수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수의 틀을 미국이 깨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변수가 아닌 상

수로 등장한다고 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세워야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래서 그 부품들, 특히 지금처럼 이번에 세가지 품목, 소위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꼭 필수 불가결한 그런 부품들이 제대로 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 있습니까? 그럼 이번 기회에 적어도 50%가 넘는, 한 곳에 편중되어 있다든가 또는 우리 국산화되지 못한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품목별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부인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대외의존도가 높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 개발이 필요한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시급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법 개정 작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백재현 위원** 작년에 대일 무역적자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한 200억 불……

○**백재현 위원** 260억 불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에서 부터도 이런 무역과 관련된 마찰을 가져오고 문제를, 이렇게 무역보복을 하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국산화할 것은 정확히 국산화해야 될 것이고 수입에 의존해야 할 품목이라면 그것은 국가별로 좀 더 다변화시켜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서 이렇게 당황스럽지 않도록 우리 생산체계를 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한 가지만 첨언해서 좀 말씀 올리면, 말씀하셨던 대로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서 장관께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작년 말부터 저희가 우리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 계획을 마련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산업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군산·통영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상생형 일자리는 지금 현재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시화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 내에서 관련법과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우선하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산업위기지역에서 대부분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형·구미형·밀양형·군산형 등등 해서 이런 위기지역 중심으로 대부분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다음에 바이오중유가 2014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서 금년 3월 달부터 이게 상용화돼서 발전원료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이 시설이라든지 자금 문제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 대책에 대해서 잘 순응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갖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바이오중유발전소에 대한 REC 가중치는 지난 5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지금 마련이 됐고요. 금년 3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상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유념하고 내용

들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지방 중소기업체로서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생계형보다는 기술창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유니콘 기업을 목표로 해서 많이 하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대단히 뒤떨어져 있고 특히 기술가치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대응책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기술창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기술가치평가와 관련해서는 기보나 현재 관련되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기술가치 부분이라든지 기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스케일업펀드 12조 원을 향후 4년 동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과밀업종 창업자 수가 증가하면 창업자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경쟁도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지난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업종 다양화에 대한 것을 보면 아직도 생계형에 많이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융기관이 이제까지의 대출에서 투자로 전환한다는 방향은 설정해 놓고 아무 대책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숙박업 또는 음식점 같은 그러한 과밀업종으로 창업이 몰리는 부분들,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자들은 그러한 과밀업종 진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업종을 먼저 지원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 예를 들면 우리 전통산업이라든지 또는 천연 재료, 약차 이런 건강음료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고 그러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그런 쪽을 가능하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결국은 금융기관이 대출 위주에서 투자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아

주 치밀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융기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구**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산업부차관님, 내가 무거운 말을 좀 해야 되겠어요. 회의 벽두에 박범계 위원께서 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기선 위원** 야당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정책협의를 필요 없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아까 홍의락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정책협의 내지는 설명을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개별 부처 차원에서 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왔습니다.

다만 여러 부처에 걸치는 일들을 마치 당정 협의의 모습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개별 부처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선 위원** 박범계 위원이 회의 벽두에 한 발언에 대해서 내가 지난 7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야당을 향해서 모멸감을 주고 그리고 능멸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입으로, 같은 입으로 협치를 얘기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얘기합니다. 지금 집권당 의원들이 다함께 박범계 위원과 같은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오만과 독선의 실상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여야가 함께 무슨 국정을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국민 앞에서 국정을 논한다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내가 예산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소위 때 하나하나 치밀하게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구**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위원입니다.

산업부차관님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님 두 분, 장관이 안 계시니까 차관 답변하기 힘드시겠지요.

지금 일본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소재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생산한 상품과 용역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수입을 규제하는 이러한 분쟁은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우리 산업의 핵심적인 소재가 되는 이러한 물품들을 생산국이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수출규제를 당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우리나라가 직접 당한 것은 제가 알기로 처음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철규 위원** 통상교섭본부장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같은 답변입니다. 우리가 당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모두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우리 대법 판결에 반발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일본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조치의 근거로 양국 간의 신뢰관계 훼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수출통제 체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전적으로 정치·외교적인 문제를 지금 경제 보복으로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철규 위원** 이미 일본과는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곧바로 갈등이 시작되고 증폭되기 시작해 왔습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예상했는데 어떤 대비를 해 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대비해 왔던 내용

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철규 위원** 글썄요, 어떤 대비를 해 오셨나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 조치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소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왔고 조만간 발표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면 과거 5년 전에 우리 국내에, 속된 말로 에칭가스라고 하지요. 이 가스공장을, 생산시설을 건설하려고 할 때 정치권에서 반대한 적이 있지요, 사례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아마 불산 사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있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이철규 위원** 무조건 환경이다 뭐다라고 하면서…… 환경의 피해를 우려한다면 전 국토를 갖다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이런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그런 데에 대해서 주무당국인,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우리 산업 생태계 전체를 꺾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항시 상시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해야만 된다’고 설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 분이 집권을 하니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산업 당국도 부처들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분들이 온 산하가 다 폐허가 되어 가지고 태양광 패널로 덮여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산업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비 못 해 왔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환경 위해성이나 주민 수용성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철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할게요.

차관 말이지요, 그러면 지난 2년간 이러한 에칭가스 이 가스를 만약 일본이 수출을 금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허둥지둥하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공격을 해 대다가 요즘 우리

풀이 뭐가 됐어요? 국민의 자존심이 뭐가 됐습니까? 5000만 국민이……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철규 위원** 차관, 좋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기업들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들 스스로 할 부분이 있고요, 정부가 같이 노력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준비하고 있다, 연구하겠다, 개발하겠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애당초부터 이러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을 관리해 오든지 또한 우리 산업부에서 일본과 이런 갈등이 시작될 때 이런 우려가 있다고 국무회의라든가 또는 현안 대책회의를 할 때 한번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당연히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공개하기가 뭐하다면 비공개라도 반드시 본 의원실로 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청와대나 또는 총리실에 전달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다음은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예, 간단히 하세요.

○**김삼화 위원** 예. 중기부차관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도 76억 추경요청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인프라 구축 50억, 홍보 및 마케팅 26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가맹점의 사용 횟수라든가 빈도 같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 12월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로페이 서비스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김삼화 위원** 그때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가맹점 한 곳당 평균 결제 실적, 월별·일별이 가능하다면 그 실적하고 건수, 금액 합해서 제출을 이번 주 중에 하실 수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김삼화 위원** 목요일 날까지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부에서 증액 요청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거든요.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김삼화 위원** 한 719억 정도 돼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예비창업패키지 445억, 초기창업패키지 154억, 창업도약패키지 120억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아시겠지만 예비창업패키지는 운영기관이 57곳, 초기창업패키지는 53곳, 창업도약패키지는 20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비창업패키지 445억 요청하면서 설명은 달랑 여덟 줄이예요. 초기창업패키지는 아예 없어요, 설명이.

그러면 이렇게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비창업패키지 같은 경우는 운영기관이 57곳인데 445억 증액되면 그냥 57곳에 n분의 1로 나눠 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눠 줄 건가요? 그런 게 전혀 설명도 없고.

아시겠지만 창업지원 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운영기관별로 또 세부사업별로 성격도 다르고 교육 역량이나 성과도 천차만별이고 이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추경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니깐 마구 갖다 넣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별로 어떤어떤 부분이 어떻게 할 건지 증액요청서를 다시 정리해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저희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그 부분만 위원님께 제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김삼화 위원** 그러면 그것 다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답변 좀 간단하게

지금……

○**김삼화 위원** 이따가 제 질의 끝나고 하시고 그것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산업부차관님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산업부가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 사업으로 요청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대략 한 290억 정도.

○**김삼화 위원** 예, 297억, 발전소 8곳. 그런데 그 8곳이 어디어디인지는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제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마는 대략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지금 미세먼지 당연히 저감해야 되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석탄보다 LNG 발전소가 미세먼지 적게 나온다는 건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8곳 중에 LNG 발전소가 3곳이 포함됐는데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것은 노후 LNG 발전소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그래서 노후 LNG 발전소는……

○**김삼화 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이후에 구체적으로 예결위에 가면 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석탄발전소 중에는 준공한 지 2년밖에 안 된 발전소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신규 발전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한두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지금 이 8곳 발전소가 의원실에서 파악해 보니까 추경하고 상관없이 원래가 올해 자체 비용을 들여서 환경설비 교체계획이 있던 곳이라고 그러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일부 자기들 자체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런데 그 자체 계획을 갖고 있던 데를 갑자기 정부가 추경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설명을 드릴까요?

○**김삼화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지금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노후 석탄 감축뿐만 아니고 상한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석탄발전에 대한 제약이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

는 배출 규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출 감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해야 될 상황이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하지만 저희가 그 수준을 빨리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일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원래 전기사업법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투자는 발전사 의무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당연히 발전사의 의무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걸 촉진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부 재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삼화 위원** 지금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기요금 3.7%를 준조세같이 받고 있지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김삼화 위원** 그리고 그동안 환경설비 개선도 자체 수익으로 해 왔고 그런데 갑자기 시행령 또 붙여서 발전사한테 예산…… 시행령 고쳤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러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3.7%로 징수하는 전력기금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이 아니고요, 전력기금으로 징수했던 것에서 다시……

○**김삼화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기사업법 시행령까지 고쳤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개정 완료했습니다.

○**김삼화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필요하면 개정해야지요.

○**김삼화 위원** 지금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혹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서 발전사들이 계속 비용 적자 문제가 나오니까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 비용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삼화 위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말씀드렸던 대로 석탄발전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지금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의 투자 여력도 상당히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구**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부당한 조치입니다. 우선은 일본의 외무상인 고노 다로도 작년 2018년 11월 14일 날 외무성에서 한국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외무상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인의 청구권을 가지고 이것이 이미 소멸된 것인양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매우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원식 위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삼권분립을 완전히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본의 안보법령 취지에도 이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본의 행정절차법 38조 1항에 보면 행정입법은 근거가 되는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 목적 수출 규제법률을 적용해서 한국을 안보무해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정당화하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보적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아베 총리는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자체를 의심할 중대한 안보적 상황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자기 법령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일본의 안보법령에도 맞지 않는 조치들에 대해서 일본에 아주 엄중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일본의 주류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서도 그렇고 아사히신문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면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 자유의 법적 안정성과 법치 요구에 모순되고 있거든요. 아베 조치가 전후 일본의 보수세력, 보수의 주류인 통상국가 일본, 자유무역국가 일본 이것과 부조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주류 언론들은 매우 비

판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의 주류 언론과도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우리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일본 안에서 이 문제들이 정리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 여론이 지금 말씀드린 안보법령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 자유의 법적 안정성과 법적 요구에 모순된다고 하는 점들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이번에 취한 조치는 일본의 국내법 그다음에 국제법에 반하며 G20 오사카선언의 정신에도 반한다는 점을 저희가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고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도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위원 그것과 함께 우리 내부에서 보면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시고 어제 총리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품목이 여기서만 제한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앞으로도 소재와 부품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성할 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반도체 소재나 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이 과거부터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화율이 너무 낮고 그리고 이미 2010년에 산자부 계획이 2015년까지 35%까지 올린다고 해 놓고 이게 아직도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대목인 거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고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비와 소재 중소기업 성장이 더딘 이유는 반도체 업계가 아주 불공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6만 7000명이고 후방산업인 장비·소재가 3만 개 업체에 140만 명입니다. 그런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47%에 48조를 내고 있는데 후방산업은 영업이익률이 5.9%, 영업이익 총계가 8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기업에서도 이렇게 이득이 나면서 소재산업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해 왔을 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소재·부품 개발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는데 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의 협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이 됐더라도 대기업에서 써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산화가 완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부터 실증과 양산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이 각각의 할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번 부품·소재 대책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셨던 수급 기업 간의 어떤 불공정 문제 또 수직 계열화의 고착 문제도 저희가 아울러서 다룰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원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 하는데 어제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라는 데서 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니까 정말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삼성, 하이닉스 두 회사는 국내 소재 생산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거의 안 해요. 신소재 공동개발은 일본하고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구세대 재료 생산 이런 정도만 맡기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전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과 같은 한국의 반도체 그리고 미국 반도체 회사가 오히려 일본 업계를 1위로 띄워 올리는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불공정하게 하고, 이것은 이번에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소재·패널 업체들 아마 이번 기회에 대단히 각성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 부품·소재 개발 자체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

서 저희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부품·소재 개발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을 해 왔지만 예산도 편차가 컸었고요, 지원 폭이.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정부와 또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근원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뜻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위원장 이종구** 그 정도로 하시지요.

○**위원식 위원**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아니요, 보충질의 때 하시지요, 그 이상은. 그 정도로 하시지요.

○**위원식 위원** 아이고, 조금만 하고 말게요.

○**위원장 이종구**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장석춘 위원** 올해 신설한 창업기업자금 내역에 보면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이라고 있지요? 사업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 사업 내용이 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지금 고용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자리창출기업을 조금 우대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특화자금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기업이라든지 또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장석춘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일자리 창출·유지 기업, 인재육성, 이 세 가지가 요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 진행 과정을 보니까 일자리유지 건수가,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의 신청 현황을 보니까요 일자리유지기업에 70% 정도 가까이가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내용하고 목적상에 지금 이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지금 그 퍼센티지가 70%라는……

○**장석춘 위원** 10개 중에 7곳 정도가 유지하는 기업에 자금이 지원됐는데, 일자리창출하고 유지하고 사업 내용을 보면 유지기업에 자금이 그렇게 한 70% 가까이가 집행됐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유지하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그렇지는 않고요. 5월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본 그러한 것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유지가 아니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5월까지 1400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장석춘 위원** 자,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거기서 받은 데이터입니다. 6월 28일 기준입니다. 6월 28일 기준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의 신청 현황을 보면 일자리유지기업한테 70% 가까이 돈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유지지 창출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유지에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장석춘 위원** 작년에 보면 한시적으로 했던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이 말만 바꿔 가지고 일자리창출촉진자금으로 올해 또 나왔는데 지원 조건이나 지원 대상이 같습니다. 거의가 동일해요. 동일한데, 작년에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의 1억 원당 고용 창출 효과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0.6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0.288명으로 기록이 되었던데요. 1억을 투자해 가지고 0.288명의 고용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업은 유명무실한 사업이지요, 보여 주기 사업이고. 차관님 돈 같으면 이런 돈을 그리 함부로 집행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저희들 자료에는 정책자금 전체가 0.29명 정도 고용을 했고요, 저희가 일자리창출촉진자금 금년에 5월까지 한 자료를 보면 0.63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올해도 보면 일자리창출에 399건이고 일자리유지에 872건입니다, 인재육성에 28건이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왜 동문서답을 하고 그래요? 작년의 청년고용기업지원하고 올해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내역이 사업 지원 조건이나 지원 대상에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3억을 투자해야 고용을 1명 늘린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은 국민 세금 가지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게 나와 버렸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글썽요, 저희 자료에는 5월까지 저희들이 1400명……

○**장석춘 위원** 6월까지의 자료가 나한테 있는데

왜 자꾸 5월까지 얘기해요 그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부가 돈을 이렇게 세금 가지고 투여해도 실효성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야당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면 민생경제를 발목 잡는다고 지금 항상 그리 얘기하는 것 아니야.

유지하는 기업에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써 가지고, 실효성도 없는 것을 국민 세금을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 문제가 있으면 이 사업을 다른 용도로 바꿔 가야지 이름만 바꿔 가지고, 지원 조건이나 지원 대상은 똑같은데. 올해도 지금 실적이 그리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왜 추경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글썄, 금년 실적은 저희들이 0.6명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이것 가지고 예산이 통과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난센스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구** 장석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갑석 위원** 유명희 본부장님!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예.

○**송갑석 위원** 결국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이 우리나라를 포괄수출 허가 대상에서 건별 허가 대상국으로 전환한다는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래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무심사로 통과됐던 품목들이 수출 허가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일본이 이번에 발표한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7월 4일 자로 당장 포괄 허가에서 개별·건별 허가로서, 개별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현재 통상 90일 정도 허가가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품목에 대해서는 7월 4일부터 당장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통해서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하던 것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수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우리가 백색국가 지정에서 빠지게 되면 일본이 관리하고 있는 전략물자 중에서 비민간 품목에 대해서 전부 다 포괄 허가가 아닌 건별의 개별 허가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송갑석 위원** 일본이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의견 수렴에는 해당 관련되는 국가나 단체나 기관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과정이어서 그 24일 기간 동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저희가 현재 관련 기관과 함께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12일 날 일본 도쿄로 가서 양자 협의를 추진 중이다’ 이것도 그러면 그 의견 수렴 이런 것과 연관돼 있는 것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그것은 의견 수렴의 공식적인 절차로서 하는 게 아니라……

양국 무역·안보 라인 간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다자회의에서도 정보 교환을 계속 해 왔는데 이번에 일본이 발표한 조치가 굉장히 불명확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있었다’ 하고 나서 그 사안이 뭔지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나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워낙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점이 많아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 파악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희는 또한 그러한 조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강하게 제기할 예정입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12일 날 양자 협의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잡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현재 12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각, 장소에 대해서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부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송갑석 위원** 이번에 반도체 업계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기존에 막연히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결국 이러한 부품이나 소재에서 국산화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을 맞기도 하지만 아까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후방 효과가……

물론 반도체라고 하는 사업의 특성이 다른 산업과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국내 부품·소재 업체들의 성장이 너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말씀드렸던 대로 부품소재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행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아마 단기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기술개발 투자와 성능평가 양산 라인에 적용 등을 지원해서 부품·소재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립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대책,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대책으로 나눠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갑석 위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포함돼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저희가 사실 이번 추경에는 부품·소재에 대한 대책 관련된 예산은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사실은 일본 수출 규제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추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다만 정부안이 이미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필요한 예산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 이종구 송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예, 간단히 하시지요.

○정우택 위원 제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이미 자료 요청을 산업부에 한 게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간 TF 구성해 회의를 해 왔다’ 이런 언급을 한 게 보도된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달라 그랬어요. 처음 어떻게 해서 회의가 구성이 됐고, 회의 개최 날짜, 장소 또 참석자, 회의록 이런 것들을 좀 달라 그랬는데 아직 나한테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료가 준비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저희가 최대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자료들 중에는 현저하게 상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저희가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우택 위원 그것은 받아 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주시고요.

또 지금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 수입해서 가공·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한 내용과 결과 자료 이것도 요청을 했는데 같이 빨리 주실 수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설명드리거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것은 어저께 장관이 발표한 거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의 일종으로 먼지날림방지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이번에 보니까 62억 원 정도를 추가 증액해서 추경안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률을 보니까 4월까지 2.12%밖에 집행 실적이 없어요. 이렇게 집행 실적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지금 올해 본예산에 보면 먼지날림방지사업이 12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중에 9개 사업이 실시설계 중이거나 사업자 선정으로 해서 공사 발주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도 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21개를 또 하겠다고 추경안에 내놨어요. 9개도 연내에 추진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21개를 더 하겠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하면 얼렁뚱뚱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거의 8개월에서 17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경을 일단 따 놓고 보자’ 이런 것으로 예산 내놓은 게 아닙니까?

먼지날림사업에 대해서는 언제 예산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겠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추경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적합하지 않다, 이번에 삭감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간단하게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금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사업계획에 대한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 신청은 많이 있었습니다. 36개소의 신청이 있었는데 예산에 실제 반영된 것은 12개소에 대한 반영만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우택 위원 제가 다 얘기한 것을 반복해서 시간 낭비할 것 뭐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래서 저희는 이것 분명히 수요와……

○정우택 위원 이것의 시급성, 필요성에 대해서, 또 추경에 이것을 지금 21개나 시료 추정 이렇게 했는데 21개나 더 갖고 온 것에 대해서 할 자신이 있느냐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저희가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연내 집행 가능하도록……

○정우택 위원 오케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러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환경조성에 대해서 지금 410억 원을 증액시켜 갖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360억이 뭐냐면 산업환경개선펀드사업으로 담아왔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소요 기간이 한 3, 4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예컨대 펀드 출자 이후에 사업자 모집 공고하고 SPC 설립까지 최소한 6개월 걸리고 인허가 하는 데 6개월에서 12개월 걸리고 공사하는 데 한 2년 걸린다는 얘기

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이것을 추경해 갖고 경기 부양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똑같이 추경의 근본 목적인 시급성과 필요성에 부합하지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2018년도에 승인된 11건 중에 10건도 지금 안 됐어요. 작년에 승인된 것 중에서도 지금 안 됐는데 이것을……

펀드의 특성상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내 일자리 창출하고는 거리가 멀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예산소위에서 산업부가 제가 말씀드린 논리하고 다른 필요한 논리를 잘 설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설명드리면 말씀 주셨던 대로 SPC 설립이나 인허가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사례를 죽 분석해 보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 소요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우택 위원 그래도 연내에 경기 부양 효과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저희 한번 최대한……

○정우택 위원 하여튼 잘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정우택 위원 그다음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이것 당연히 수요가 늘어납니다. 본예산에 1000억 원인데 신청액만 135%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행은 왜 이렇게 안 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한 85%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 이것 좀 해명을 해 주시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이 집행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요는 증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김정재 위원도 새로 오셨지만 그쪽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집행이 좀 저조하니까 관리 철저히 해 달라, 제 주문은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마지막으로 수출바우처사업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수출 마케팅 서비스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바우처 신청률이 2.7 대 1로 새로운 필요한 기업들의 신청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의 1차 선정, 2018년·17년 2년 동안에 이미 바우처 신청한 기업이 중복 선정된 게 22.5%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복 지원을 좀 지양하고 새롭게 하고 싶은 기업들에 좀 더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차관 생각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그 부분은 어쨌든 실제로 필요한 기업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추경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이것 사실 중소기업부차관한테 묻는 것인데 내 눈을 산업부차관한테 맞추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중소기업부 잘 들으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우택 위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기업당 그러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규모별로……

○정우택 위원 긴급안정자금 문제도 사실은 중기부 소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긴급안정자금 문제도……

○정우택 위원 어쨌든 제가 두 분한테 눈을 맞춰서 미안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정우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잠깐 우선 자료 요청 저도 하겠습니다.

아까 정우택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요. 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의 보복 대응 조치가 예상

되니까 TF를 구성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구성원이 누구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몇 번이나 회의를 했는지 그리고 또 회의록 이런 부분을 저한테도 좀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그래서 제가 일본 수출 규제에 의한 예상 피해 품목들의 대일 의존도 등 그런 현황을 좀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산업부가 있으나마나 한 그런 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있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국회는 국회대로 의원외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부에서 국회를 정부의 전략을 노출하는 그런 스포일러가 아니라 파트너로 좀 생각하시고 자료 제대로 좀 주시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좀 답답한 것이 우선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미국에서 관세 폭탄 카드를 구사했을 때 중국에서는 ‘희토류를 공급하지 않겠다’ 이런 카드를 또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미국은 ‘그러면 대만에 대해서 두 개의 중국으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게 아주 다양한 카드를 구사하면서 복잡하게 전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일본에서 그런 조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 예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WTO 제소한다고 그러잖아요. WTO는 몇 년 걸려요. 2, 3년 걸립니다. 그러면 갓 쓰다가 장 파한다고 이 글로벌 경쟁 시장에 있어서 몇 년간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 뒤처지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지금 통상본부장님 나와 계시는데 WTO 제소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WTO 제소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유효한 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간이 걸린다 이거지요, 판결까지는. 물론 여론 조성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여론 조성한다고 그래서 일본이 움직이겠습니까?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조배숙 위원 뭐 어떤 대안이 있어요, 지금, WTO 말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이런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배숙 위원 그게 어떤 대응이에요, 어떤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때까지는 맞대응을 통한 소위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보복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조치 가능한 대응 수단들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어떤 시점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와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지금은 말을 못 한다 이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조배숙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가 문제인데 또 자동차 산업에도 불똥이 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지요.

앞으로 수소자동차를 한다고 합니다. 이 수소자동차와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국산화율이 제로인 경우도 있어요.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기체화산층이라는 데는 국산화율이 제로예요. 전부 다 일본이나 다른 데, 독일에 수입해 와야 돼요.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던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파프리카, 우리 생산량을 거의 완전히 수출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복이 들어올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저는 WTO 제소 말고 다른 대응 방안이 뭘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치밀하고 전략적이지 못하다, 아마 일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징용 배상 판결 조짐이 보이면서 전부처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머리를 짜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랍니다. 또 지금 현재 일본의 선거 상황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낙관적이고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나……

일본의 이런 움직임 감지를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위원님, 당연

히 감지했구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대응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유념하고 좀 더 치밀한 대응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듯이, 저희는 지금 일본 정부나 여러 가지 기업의 움직임 면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일본도 우리 정부나 우리 국회에서의 발언 내용이나 여러 가지 대응조치에 대한, 예상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의 발언과 국회 자료 제출에 있어서 정부는 정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종구 그렇게 하세요.

○조배숙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있잖아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건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폐업을 막 해요. 그런데 한계상황이 와서 폐업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한계상황이 아닌데도 선제적으로 폐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영위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앙에다가…… 지금 장관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장관님도 비슷한 공감을 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의 그러한 현실 그리고 바람을 반영해 주는 그런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이훈입니다.

중기부차관님께 먼저……

방금 앞서 말씀하신 조배숙 위원님도 중소상공

인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달 6월 26일 날, 같은 상임위에 계시지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위원님하고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중소기업인들, 자영업자들에게 하는 보증 정책에 대해서 기자회견 하신 것 혹시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알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예, 들어 알고 계시지요. 이 대내외 약제에 대해서 누차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부 출연금을 대폭 늘릴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본 위원은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 중에 보면 보증 업무하고 있는 데에서 공격적 운용배수 운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관의 부실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만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늘려야 될 거라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 또는 기타 대출, 융자 이런 부분에서 같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훈 위원 예, 그래서 중기부에는 이것 관련해서 3개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신보가 있고 기보가 있습니다. 물론 각 기관마다 보증 대상이나 기능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금 우리 경제에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여기의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기보는 400억, 신보 600억, 지역신보 한 150억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급성에 비해서 사실은 너무 작아 보여요. 특히나 기존의 신보나 기보나 지역신보에서 보증을 해 줬던 대상으로 보면 저희들 얘기로는 그레이존이라고 하는데 애매한 지역들이에요. 신용등급상 보면 애매한,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신용등급이 낮아서 이러한 보증혜택이나 이런 걸 전혀 못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좀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

는데 그걸 위해서 기금별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번 추경에 1000억 정도씩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50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보증 또는 여러 가지 용자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하여튼 추가로 그런 부분 플러스 해서 만기연장 같은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훈 위원 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차관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관련해서 일부에서 보니까 원전과 화력발전보다 발전단가도 비싸게 사 주고 그러면서 금융도 지원하고 이게 국민들한테 이중 부담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주장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발전단가 산정체계 자체가 아직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 체계를 못 만들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계속 손해를 야기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 원전하고 화력발전은 계속 이익 보는 사업이 돼 버려요. 그러면서 ‘왜 이익 보는 사업 놔두고 손해 보는 사업에다 자꾸 하니? 왜 국민 세금 거기다 쓰니?’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논의는 계속하는데, 본 상임위에서도 균등화 발전비용 관련해서 계속 논의는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018년 2월에 이것 관련해서 발표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만 제대로 발전원가에 반영시켜 줘도 이런 문제가 훨씬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그 노력을 안 해요.

이 균등화 발전원가하고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실제로는 발전총괄원가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판매단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고요. 다만 2017년도에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가 그 자료에 근거하신 것 같고 지금 2019년 연구용역을 예정연이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균등화 발전 원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전단가 산출기준의 재정비 필요성을 계속 검토해 나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훈 위원 그 검토가 그러니까 실제 스텝을 밟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듯이 일본 수출통제 관련해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받을 피해는 되게 직접적이고 즉시 올 것처럼 예상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체계를 보면 약간 중장기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좋습니다.

○이훈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대응이 저는 좀 전략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에티튜드의 문제가 좀 있는데, 대응을 크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이 있고 통상적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외교적 관점이 있고 기업적 대응이 있을 겁니다. 기업에서 하는 대응이 있습니다.

기업은 사실은 엄격히 보면 약간 비상플랜을 가동해야 될 입장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산업부나 외교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굉장히 기업적 측면이 존재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 대응할 게 뭐가 있는지도 충분히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국제공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 언론 접촉하신 것 보니까 아웃리치 활동도 충분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개별화시키지 마시고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대응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셔야 불안감이 덜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들

을 잘하고 계신데 너무 개별적이세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이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오늘 모두에 의사진행발언에서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산불피해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야당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협의하고자 배석을 요청했는데 1시간 전에 다 거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과장님, 국장님, 차관 전혀 보내지 않았습시다. 아주 급하게 연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차관님, 정부의 공무원들이 여당의 공무원은 아니지요? 공복이시지요? 국민을 말하는 거지요?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렇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래서 아까 당정 협의 업무가 물론 국무총리 훈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야당에서도 대한민국 공무원들, 장관 차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같이 대안을 찾는 그런 일을 해야 그게 국회의원 일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저희가 예산 관련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예결위 소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거기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지역구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난 지 2017년 11월 15일로 해서 약 6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을 잃은 주민들이 바깥에 나와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시다만 실질적인 지원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중기부에서 주는 경영안정자금의 낮은 융자금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세부내용을 보니까 포항을 지원한다고 80억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맞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 옆에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현재 상황은 어떠냐 하면 지진이 이번에 인재로 됐습니다. 지열발전 때문이라는 인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충분히 이에 대해서

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시설 피해가 발생한 제조업은, 소위 말하면 무너진 회사들은 시설 복구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또 특히나 생산이 중단되고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당연히 막대한 경영 피해가 발생 되겠지요. 경영이 악화되니까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 대출 이자율이 높아 집니다. 한마디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용등급 하락으로 약 2.7% 정도 이자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번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지금 80억인데 기업당 연간 10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제조업 평균 금융대출 금액은 다 아시겠지만 약 20~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아직 선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융자 한도를 2배 정도 늘려서 추가 80억 원을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현재 반영된 80억 원은 기존의 45개사에 대해서 1억 7000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해서 저금리 융자인데 지금 말씀하신 재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용에 따라서 상승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예, 확대 추가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지열발전 시설 사후관리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 지금 저희 포항에 지열발전이 이번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김정재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열발전소 자리의 시설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전성 검토 전문가 TF를 구성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는 이번 전문가들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여기 사후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습니까?

○위원장 이종구 예.

○김정재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1분 더 하세요.

○김정재 위원 예.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 부지가 현재는 넥스지오라는 회사가 갖고 있지만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채권단으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할 지표지진 계측 시스템 또 그리고 초정밀 GPS 계측 시스템, 소위 말하면 더 자세한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부지, 지열발전이 있는 부지를 저희가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지 매입 또는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하는 데 예산이 추가로 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관리가 수년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부지를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부지를 또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대해서 포항시도 아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포항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방안이 수립된다면 추경이 아닌 내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김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산자부차관님, 부당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앞으로 장기화될 수도 있고 또 반복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확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국산화 부분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당장 수입의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는 만큼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중의 한 가지는 국내에서 대체생산 설비를 확충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증설사업이 있고 또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여러 가지 환경규제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가능한 빠른

절차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수입선 다변화 그다음에 다른 방식의 수입을 지금 기업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재나 부품이 적용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의 실증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증 테스트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들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특히 수요 기업들이 그런 성능 테스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등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다변화와 관련해서 하여튼 다변화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할 수 없는 품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변화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비책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간략하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기업들이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변화 노력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구체적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산화와 관련해서 어쨌든 긴급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라든지 또는 다른 재정의 투입을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이 제출될 당시에는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런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을 좀……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이렇게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그런 부분에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예산상 미리 대비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을 한번 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정부는 안을 거의 수립했습니다.

○**최인호 위원**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규모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말씀 주셨던 대로 부품·소재의 근원적 경쟁력 확보 그다음에 초단기 대책에 필요한 예산 거의 대부분을 다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입는 수입 품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부품·소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비교우위에 있는, 특히 일본과 관련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나 품목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돼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다 돼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 공개하기가 그러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자료를 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육성해야 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소재 분야, 부품 분야 이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상용화가 확실한데 비교우위에 있는 개발단계,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는 품목 예를 들면 그래핀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책이 이번 일본의 이런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도 대응할 카드가 다양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떤 집중 육성책,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품목이 있으면 또는 육성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구체적인 품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양한 업종 또 우리가 앞으로 키워 나가려고 하는 핵심 산업 그리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장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화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최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오늘 의안이 추정인데요. 제가 예산소위 위원이고 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국민적 관심사가 일본의 경제 보복이네요. 이것 국민들의 굉장히 현안이고 실제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냐 하면, 제가 아베 정권을 비호하는 게 아니에요. 아베가 자유무역원칙에 분명히 위반되어 있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 문제가 분명히 예견돼 있던 문제예요. 작년 10월에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있을 때 이후에 지금 8개월을 방관을 한 거예요. 내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대통령비서실장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면서 왜 아베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를 현안을 해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 코웃음 쳤고 일부 언론은 저보고 친일파라고 지칭을 했어요. 일본하고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더니 일부 언론에서 저를 친일파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이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본의 보복을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능해도 됩니까? 이것 산자부에 묻는 게 내가 미안해요, 산자부한테 이것을 묻는 게. 왜? 산자부가 해결할 사안이 아니에요. 김상조 정책실장은 자기가 1·2·3부터 100순위까지 보복 리스트를 해 놔더니 딱 1·2·3순위 꼭 짚어서 보복을 했다. 그것 알면서 왜 대비 안 합니까? 아니, 그게 정책실장이 할 말이에요? 그리고 청와대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이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와대에서 산업부에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산업부에 물어보라고. 이게 산업부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유섭 위원** 아니, 조금 이따가 하세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대책회

의 산업부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WTO 제소하겠다, 또 무슨 소재·부품 산업 육성하겠다, 또 불화수소 이런 것에서 일본 측 논리를 파악하겠다. 또 외교부장관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일본의 보복조치가 나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강대강이네요. 강대강인데, 이게 국제관계에서 말이지요, 아까 산자부장관 삼권분립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삼권분립은. 국제관계에서에서는 삼권분립을 얘기하면 안 돼요. 국제관계에서는 힘과 실력이 있으면 강하게 나가는 것이고 힘 없으면 바짝 낮춰서 실력을 길러야 돼요. 지금 강대강으로 가 가지고 우리가 이익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업부에서 이 문제 해결 가능합니까? 해결 가능하면…… 지난 2·3일 우리가 일본에 이것 가지고 회의하자고 했다며, 산업부에서요? 일본의 반응이 뭐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금주 금요일 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일본 측과 조율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유섭 위원** 그러면 금요일 날 만나서 산자부가 이게 해결이 가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정치외교적인 문제가 이 경제 보복 조치를 촉발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협의도 필요하고 또 이 조치 내용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자, 지금 트럼프나 아베나 하는 일이 다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행동해요. 그리고 지금 문제인 정권의 앞 정권, 노무현 대통령도 시작도 국익 끝도 국익이라고 하고 정책을 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지금 산업부한테 이것 맡겨서…… 내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총리한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물론 내가 좌석에서 했지만, 아니 대통령이 안 나서면 일본통이라는 총리가 나서서 일본에 가서 만나고 회의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것을 최초 반응이 산업부에 물어보라? 이것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산업부가 이것을 해결 못 한다니니까요, 이런 문제를 징용공 판결에서 파생된 문제를 어떻게 산업

부가 해결을 합니까? 산업부가 얘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필요한 그런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저기서 찾는 것 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산업부가 해결합니까? 이것은 산업부에서 해결 못 한다고 하시고 총리 또는 청와대 보고 해결하라고 그러세요. 일은 거기서 벌여 놓고, 일은 자기네들이 다 벌여 놓고 왜 산업부에 미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 부처가 각각 할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산업부는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기업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근본적인 근원적 경쟁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우방들이 공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조 노력을 저희가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산업부도 저희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당연히 일본이 부당하지요. 부당하다고 그래서 치킨게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킨게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위원장 이종구 정유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베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무역 보복 조치를 한 것이지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 부분조차도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일간의 신뢰관계 훼손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그 공식 발표 이후에 여러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에서 일

제 징용 판결과 관련된 보복 조치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언급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징용공'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징용공의 단어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제가 바로 정정을 했습니다. '징용 판결'이라고 저희가 정정을 했고요.

○위성곤 위원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의원님께서 징용공이라고 하시고 앞서도 징용공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용어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용 피해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야당의 대표도 그렇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실제 정부에 다그치기만 하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조치를 정부가 해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베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저는 야당에서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아베 입장을 수용할 것인지라는 입장 정리를 갖고서 이 문제를 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유와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유와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이……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얘기한 것은 신뢰 훼손 그다음에 수출과 관련된 사안이 있었다. 신뢰 훼손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통상 WTO 협정상 그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이고 구체적인 무슨 사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무역 보복 조치는 아베가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본인들이 경제적 우위 그리고 한국의 아픈 약점을 잡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규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탄 속에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만 억박지르고 정부에게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의 정책이나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정부가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결국은 외교관계로 풀어낼 수밖에 없을 텐데,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고 공정성을 지향하는 세계 각 나라들에게 외교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여론을 통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이것을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너무 유순하게 정책을 대응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 관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아베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기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되고요. 정부 뒤에는 현명한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야당도 건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매일 앉아서 정부만 공격하고 문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뻔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저는 한탄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현재 문제가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사실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의 꿀맛만 보고 다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선도 일본에 집중되었고 또한 국내 산업의 육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서 산업 전반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다.

○**박맹우 위원** 박맹우 위원입니다.

중기부차관님께 좀 여쭙보겠습니다.

차관님, 이번 예산에 제로페이 예산 76억 원 편성된 것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박맹우 위원** 제로페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지금 초기라서 속도가 느리지만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지금 현재 8억 원 이하의 수수료 제로 또 이용자에게는 소득공제 40% 이것을 내걸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박맹우 위원** 그런데 과연 수수료 제로가 실지 제로가 아니라 결국은 은행이나 플랫폼 업체에게 전가된다는 것 알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그것은……

○**박맹우 위원** 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용자에게 소득공제 40%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지금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런데 아직 법안 심의도 안 되고 결정도 안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40% 공제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지금 그것은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법안 내놓고 국회라는 데가 시의 의견대로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따르는 곳은 아니지요. 다 그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종 결정했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이것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이것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정말 이것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께서는 ‘초기라서 미약하지만 앞으로 잘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초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두 달 실적을 한번 보니까, 통계가 그때까지밖에 없어서 보면, 그 사용 횟수를 비교해 보니까 신용카드에 비해서 0.000126%, 체크카드에 비해서는 0.0002, 현금영수증에 비해서는 0.00038, 이것 눈물 나는 결과 아닙니까? 정말 비참합니다.

차관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이것을 하느라고 98억을 홍보비와 플랫폼 편성 등등 해서 투입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98억 투입한 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박맹우 위원 차관님, 이게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 아예 그냥 현금으로 나눠 주는 게 좋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지금 거의 이용되지 않는 이 상황을 놓고 98억이나 들였어요. 이 98억, 요즘 조 단위로 나가니까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것 혈세입니다. 세금 중에는 눈물로 내는 세금, 망해 가면서 내는 세금이 많습니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냐고요.

더 놀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는 볼 때 76억이 아니라 760억을 편성해도 전망이 없다고 봅니다. 왜? 우리 신용카드·현금카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리스는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한 96%나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편의성이 존중되고 한 신용카드 쪽으로 가지 왜 불편한 QR을 찍어 가면서 이것을 쓰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제가 야당이라서 정책을 일부러 나무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이것 자체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이것은 스톱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국가권력이 칼 잘 든다고 해서 시장경제에 개입해서, 가격구조에 개입해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국가권력이 시장경제에 개입해서 안 망한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제로 카드회사 팔목 비틀기를 할 때…… 나중에 거기는 거기대로 실직하고 다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돈이 그 돈인데, 그것을 그것으로 미루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우리가 정책 입안자로서 또 집행책임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아무리 소상공인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달래기 위해서라도 할 것을 해야지, 이것 전망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이 47만 원 사기친다 어쩌다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봉 6000~7000 되는 사람의 절반을 다 여기 QR코드 찍어 가면서 제로페이

써야 가능하고, 등등 그런 통계를 보면 제로페이 정책은 전망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또 76억 원을 쏟아 붓는다……

지금까지는 시행착오로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폐기하십시오. 제로페이 정책 폐기하시고 예산 전액 삭감을 건의드립니다. 전액 삭감돼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제로페이는 0%대 수수료로 우리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되고요. 실적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라서 지금 꾸준하게 증가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가맹점이 25만 개 정도가 되고, 지난 5월 1일 날 5대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서 POS기와 연계함으로써 1일 평균 한 2억 원대의 결제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150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 부분을 40년이 지난 결제 시스템이 정착된 신용카드 현재와 지금 시작한 이것을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신용카드도 초기 단계에서, 사실 그 당시 초기에 공급할 때는 이것보다 더 결제 속도나 시장에 적응하는 속도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76억 편성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전통시장이라든지 추가로 가맹점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25만 개 정도의 가맹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중에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QR 키트 카드 리더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당 한 8000원 정도 또 QR 키트 그다음에 QR 단말기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25만 개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50억이 필요해서 50억을 상정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26억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 당초의 계획보다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홍보비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은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그것이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장 중요한 카드 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되게 되면 민간의 운영을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구** 자, 됐어요.

○**박맹우 위원** 차관님, 제가 볼 때 그 말씀만 듣고 보면 그럴 듯하다고 느낄 부분은 있으나 전체를 놓고 보면 허상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엽적인.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책을 우리가 최선으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한번 해 보자 했으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접을 수 있는 용기도,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렇게 국가 예산을 들이댈 겁니까? 그리고 그 시스템 유지하는 데도 1년에 30억, 40억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장 가격구조에 국가 예산을 평평 들여 그렇게 왜곡시키면서, 다른 카드 업체 망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건의드리지만 이 예산은 한 푼도 올라가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종구** 박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제가 예결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할 말도 많이 있지만 자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질책만 하고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일요일 날에도 우리 당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관계된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함께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정부의 어려움을 우리가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고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언론에서 그런 점을 높게 평가해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도 이런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긴급하게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외교를 전개하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방일도 추진하자

하는 의견도 합의했고 또 결의문도 국회에서 채택하자 하는 그런 합의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우리 당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뜻에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질의이지 이것이 질책만 하고 대안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구** 이종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박범계입니다.

몇 가지, 지금 WTO 이사회 긴급 상정된 게 맞습니까, 유명희 본부장님?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위원** 구체적인, 지금 일본 측의 이러한 화이트 목록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구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WTO 제소를 마치 큰 대책이 아닌 양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권리구제를 하는 데 우리나라 개인이 사적인 권리구제 한다, 즉 국가의 법질서, 법질차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니까 가서 사적으로 폭력을 쓴다든지 하면 그게 올바른 법치국가 아니지요? 문화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통상, 정치적 보복을 목표로 한 이러한 통상적인 터무니없는 규제에 대해서 당연히 WTO에 제소하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고 확신합니다.

본부장님, 차관님, 그런 확신 갖고 계시지요?

잘못하게 말씀해……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예,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위원** WTO가 대책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냥 제소를 해서 거기서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것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홍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곳 우리 대사님 이름이 뭐지요, 성함이?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백지아 대사가 제네바에서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백지아 대사와 일본 대사 간에 붙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 대 0이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국제 평화주의와 국제 문화주의와 전 세계 평화 애호라는 관점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던 말이에요. 그 과정 하나 하나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우방 국가들이 일본의 이러한 군국주의적 망상에 기초한 패권적인 발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박범계 위원** 그런데요 참 개탄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을 규탄하기도 전에 정부를 먼저 비판하고, 우리 정부를 먼저 비판해요. 대통령한테 굴종하라고, 아베한테 가서 굴종하라고 대통령만 앞서 밀어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조차도 마치 그것이 잘못된 듯한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들을 여러 군데에서, 도처에 목격할 수 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되기 전에 1909년에 기유각서라는 게 체결됩니다. 1905년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경찰권을 빼앗고 1909년에 우리나라 사법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게 기유각서입니다.

어떻게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고 그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본은 말이지요, 일본은 철저하게 행정부 우위의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일본에서 행정부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의 사법권의 시각과 우리 사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가. 그러면 그 문화가 다른 것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청구권협정 말이지요, 그 당시에 1965년입니다. 일제 36년에 대해서 불법성을 청구권협정에 넣지 못했어요. 두 번째, 개인 청구권을 국가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군국주의입니다. 전체주의이고 그것은 파시스트나 하는 짓이에요. 공산주의에서만 하는 짓입니다. 대한민

국 자유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떻게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5억 불 받고 ‘다 통이야. 끝’, 그것은 자유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한 내용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라고요. 일본이 시비 걸 일이 아니예요. 그것을 조목조목, 통상 부처라 하더라도 산자부라 하더라도 조목조목 설명이 가능해야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산업적 관점, 재네들은 산업적 관점으로 지금 규제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관점으로—그렇지 않아요—규제하는데 그것을 무슨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우리가 언제 걸릴지 모르는 우리나라 소재산업을 활성화한다든지…… 이것 매가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장관 중소기업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 그냥 산업과 통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이론적 무장이 돼 있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관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1분만……

○**위원장 이종구** 더 하세요.

○**박범계 위원**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박범계 위원** 이번에 모태펀드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창업초기펀드 1500억, 스케일업펀드 500억 그래서 2000억이 편성돼 있구먼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박범계 위원** 그런데 이 모태펀드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2016년에 36.8%에서 2018년 28.6%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원인이 뭘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모태펀드로 좀 투입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 비중이 감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감소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일이 아니라 진짜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자, 연도별 신규 벤처 투자 및 창업초기기업 투자 규모 비중도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하고 있어요.

마지막이니까, 예산 관련된 것이니까……

○위원장 이종구 계속하세요.

보충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범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 WTO도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결론은 소재·부품을 살린다 이게 중요한 관점인데 소재·부품을 담당하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박범계 위원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도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난다, 그래서 신규 벤처투자가 한 3조 4000억 된다고 그래 가지고 과거보다 훨씬 증가했습니다. 대단히 비약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의 신규 벤처투자는 5830억에 불과합니다.

소재 산업, 소재·부품 제조업에 아주 혁신적인 벤처투자를 할 의향이 계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 점을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구 그 정도로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일단 관계부처와 같이해서 이번 대책에 R&D 비R&D 관련 대책을 포함해서 같이 협조 중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펀드 관련해서는 지금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모태펀드의 일정 부분을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에 투자하는 그러한 전용 펀드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범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구 일단 질의는……

○박범계 위원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구 예?

○박범계 위원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구 아니요, 조금만 주세요.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보충 및 추가질의를 원하시면 여기 세 분 계시니까 제가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길부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ICT 융합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강길부 위원 이것은 울산시하고 산업부하고 공동으로 추진 중인 ICT 융합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 건조 및 실증 사업인데 이것을 실제 필요성이라든지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벤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품은 아주 좋게 잘 개발해 있는데 선주사들이 요구하는 트랙레코드(track record), 실적을 확보하지 못해서 판로 개척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강길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ICT 기술 고도화는 물론이고 판로도 잘 개척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조그마한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수요처는 오히려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업계를 지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구 박범계 위원님 하시지요, 3분.

○박범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범조인 출신이 산자위 와서 혁신성장만 강조하니까 홍일표 당시 위원장님이 저보고 혁신성장의 전도사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 말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에서 줄어들었다, 김학도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박범계 위원 여기는 결국은 2014년도에 보니까 벤처투자 금액이 한 1조 6000억에서 지금은 3조 4000억으로 모수가 증가했으니까 비율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2배 규모로 벤처 투자액이 증가했으니까 대단한 혁신입니다. 그러나 비율도 2014년도 30%대를 저는 유지하는 것이, 아니 그것보다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그리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박범계 위원 실제로 왜 그런고 하니 각 기업의 업력, 소위 창업을 해서 3년 된 기업, 5년 된 기업, 7년 된 기업, 10년 이상 안정성 들어간 그

런 기업들, 이렇게 벤처기업들을 보면 실제로 창업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기업의 73.3%가 정말 투자를 원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수요처거든요. 그러면 그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예.

○박범계 위원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VC 생태계(벤처캐피탈 생태계), 모험자본 생태계가 가능하나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VC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꿈과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그러한 신규 초기 창업 혹은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 자금 수요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 벤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 창업하는 사람들의 94%가 소위 정부 모태펀드를 비롯한 VC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통계조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VC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우리나라에서 민간 중심의 VC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 문화상 단기간에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런 진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 그래서 모태펀드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저는 대통령님만 오로지 그냥 일구워짐으로 혁신성장 강조하고 손정의 회장 만나 가지고 그렇게 하소연 하다시피 부탁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가, 부처 공무원들이 근본적인 혁신의 생각과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창업에 대한 자금 생태계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혁신을 장관님들과 한번 의논을 해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한마디씩 좀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이외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모태펀드 부분과 또 기타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1~3년까지의 초기창업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창업 패키지 부분의 수요가 말씀하신 대로 한 130%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도 관련해서 예비 단계, 초기 단계, 도약

단계, 7년까지의 도약 단계 해서 이번에 760억의 추경을 다시 또 신청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모태펀드나 VC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확대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부족한 부분 또는 추가적인 예산 부분은 이번 추경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을 같이 요청을 해서 반영 되도록 해서 현재의 벤처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초기창업 초기 투자 비중이 2015~2017년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에 사상 최고의, 3.4조의 벤처투자를 이루었고—물론 창업초기 비중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금년 들어서 다행히 계속해서 5월까지 실적은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창업초기 투자 비중도 34% 이상, 2015년 이전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그것은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위원장 이종구 됐습니다.

○박범계 위원 산업부차관님도 한 말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혁신성장의 주체가 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저희 산업부의 정책과 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또 강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이 글로벌 챔프로 가는데 있어서 양 부처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과 지원의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총 6건의 안건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들이 계십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

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부·중기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 위원(27인)

강길부	곽대훈	권철승	김기선
김삼화	김성환	김정재	박맹우
박범계	백재현	송갑석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윤한홍	이용주
이인영	이종구	이종배	이철규
이훈	장석춘	정우택	정유섭
조배숙	최인호	홍의락	

○청가 위원(1인)

김관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전문위원	박장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차관	정승일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기획조정실장	김정환
정책기획관	이호준
산업정책관	황수성
소재부품산업정책관	강경성
제조산업정책관	최남호
지역경제정책관	안성일
에너지혁신정책관	이용환
자원산업정책관	김정희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김정일
무역정책관	이호현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장	이은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차관	김학도
해외시장정책관	김문환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상훈

정책기획관	변태섭
성장지원정책관	원영준
지역기업정책관	배지철
창업진흥정책관	권대수
벤처혁신정책관	오기웅
기술혁신정책관	김영태
소상공인정책관	김형영
상생협력정책관	박종찬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김현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권평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황규연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창섭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이청룡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석영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원장	정양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 원장	최철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임춘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조봉환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본부장	장남준
창업진흥원장	김광현
(재)신용보증재단중앙 회장	김병근
(재)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최영선
(재)대·중소기업·농 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